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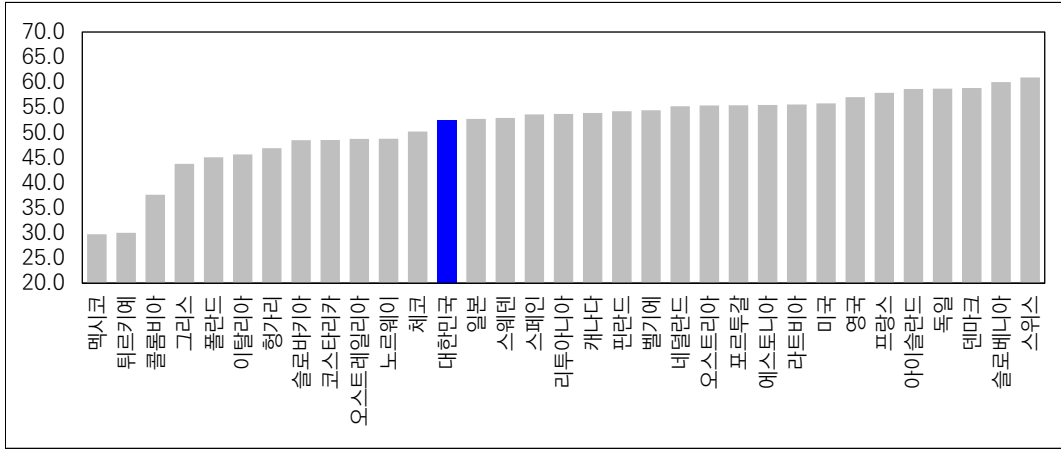
최근 피용자보수비율과 임금불평등

- 한국의 피용자보수비율은 52.5%(2021년, 총부가가치 기준)로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증가함.
 - 한국의 피용자보수비율은 1996년 51.3%까지 증가하던 추세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40%대로 감소하였고, 2019년 50%대를 회복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임.¹⁾
 -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 한국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피용자보수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2019년 대비 증가한 국가군에 속함.
- 2021년 한국의 총부가가치는 2019년 대비 7.2% 증가, 피용자보수는 8.7% 증가함.
 - 피용자보수비율($\frac{\text{피용자보수}}{\text{총부가가치}}$)의 변동은 총부가가치와 피용자보수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함.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컸던 2020년의 경우,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총부가가치가 감소한 상황에서 한국의 총부가가치는 소폭 증가하였고, 피용자보수는 둔화하였으나 총부가가치 증가폭보다는 컸음.
- 여기서 피용자보수비율은 노동소득분배율과 차이가 있음.
 - 한 나라 국민들의 생산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각각의 생산주체(노동, 자본, 경영 등)에게 분배되며,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분배되는 급여가 피용자보수임. 피용자보수에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부담금은 포함되지만 자영업의 노동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피용자보수에다 자영업 소득(=자본소득+노동소득) 중 '노동소득'을 고려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노동소득의 상대적 비중'을 의미함. 하지만 '노동소득'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영업 소득에서 '노동소득'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등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은 다양한 산식으로 측정가능하며, 산식에 따라 과대·과소 측정의 소지가 있음.

1) 본고에서 제시한 '피용자보수비율'은 OECD에서 발표하는 총부가가치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임. 한국은 행은 요소비용국민소득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노동소득분배율로 발표하여 왔으며, 2022년부터 '피용자보수비율'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표함.

[그림 1] OECD 회원국의 피용자보수비율(2021년, 총부가가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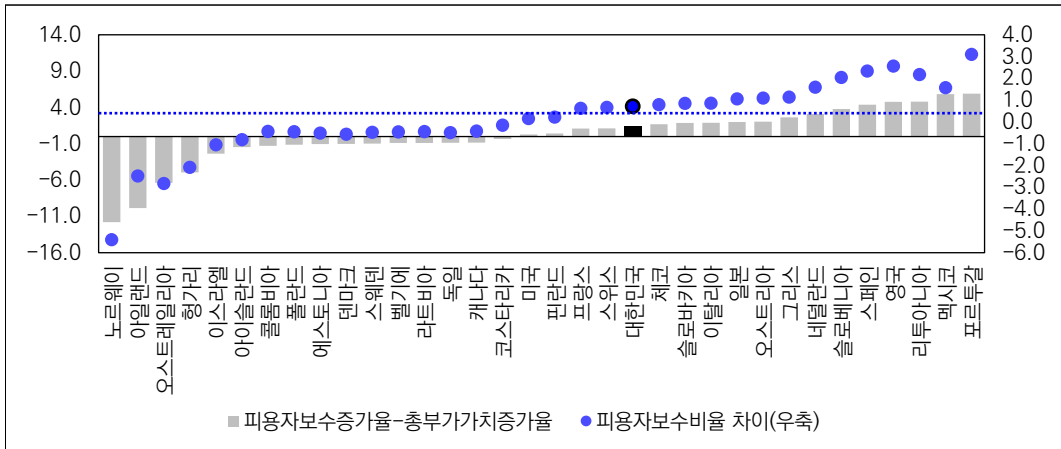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

[그림 2] OECD 회원국의 피용자보수증가율과 총부가가치증가율의 차이(2019~2021년)

(단위: %p)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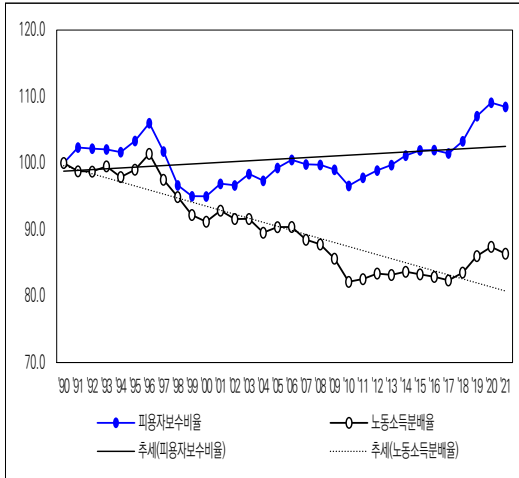
○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자영업의 '노동소득'을 고려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된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수치상 차이는 있으나 감소하는 추세가 공통적으로 나타남.

- 1990~2021년까지 피용자보수비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는 다르지만 최근 두 지표의 움직임은 유사한 것으로 관찰됨.²⁾

2) 자영업의 '노동소득'이 임금근로자의 노동소득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고용통계를 반영하여 측정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2021년)은 OECD 회원국 중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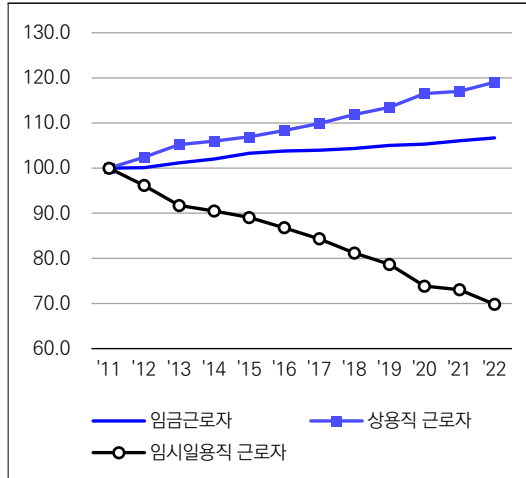
[그림 3] 사용자보수비율 추이

(기준연도=1990년)



[그림 4] 임금근로자 구성변화

(기준연도=2011년)



주 : 1) 총부가가치 기준임.

2)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의 노동소득을 임금근로자의 노동소득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측정함. 노동소득분배율=(사용자보수+(사용자보수/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총부가가치*100.

3) 임금근로자는 취업자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최근 사용자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근로자의 임금(2021년)은 2019년 대비 5.7% 상승함.

-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지속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고,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감소는 전체적인 임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21년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6% 증가에 그침. 0%대이던 물가상승률이 2%대로 상승한 것이 실질임금상승폭을 제한한 주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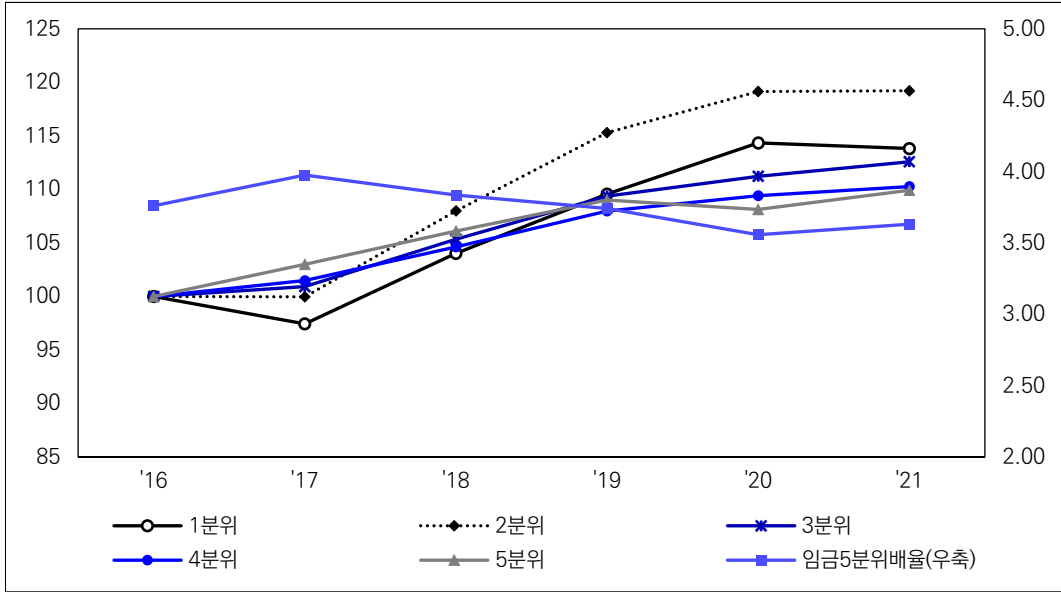
○ 2021년 임금불평등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의 임금5분위별 실질임금상승률을 보면, 고임금 집단인 5분위의 실질임금상승률은 가장 낮고, 저임금 집단의 실질임금상승률은 높아지면서 임금불평등 지표인 임금5분위배율은 2021년 3.63배로 2019년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저임금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감소로 인해 저임금 집단인 1분위에 속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2019년 33.7%에서 2021년 30.1%로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임금불평등 완화 정도는 다소 축소될 여지가 있음.

○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2021년 임금5분위배율은 2020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임금5분위별 평균임금과 임금5분위배율 추이

(단위 : %, 기준연도=2016년)



주 : 실질임금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 최근 피용자보수증가율과 임금근로자의 명목임금상승률이 크게 상승하고,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가 해를 거듭하며 지속되면서 임금불평등 완화 추세는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불거지는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불안정한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고, 결국 집단간 불평등은 심화될 것임.
- 국내외 기관들이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현실에서 저임금·취약계층의 고용유지와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나아가 임금불평등 완화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KTU**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